

광주 도시철도 공사 산수오거리, 진동 누적에 주택 균열 의혹

주민 “하루 500번 진동… 무너질까 두려워” 하소연 당국 “안전 기준치 이하 진동 측정… 피해보상 검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인 광주 동구 산수오거리 일대 노후 주택에서 균열이 발생, 원인으로 공사 이후 마감 불량에 따른 진동 누적이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진동이 주택 안전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국 공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피해 보상의 범주에 들지 않으면서 당국과 주민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광주시 도시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철도2호선 공사 구간 중 6공구에 해당하는 산수오거리 일대는 지난 7월 기준 공정률 94%를 기록하면서 상부 복공판 등이 모두 철거됐다.

철거와 함께 도로상에서 진행되는 공사는 모두 마무리됐지만, 주민들 중 일부는 지하에 없던 동공이 생기면서 차량이 지날 때마다 진동이 생긴다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일대 지어진 40여년 된 노후 주택의 경우 공사 이후 누적된 진동으로 담벼락과 내부 화장실 등이 갈라졌다고 주장한다. 마당이 솟아오르고 집안이 일부 기운데다 현재도 대형 화물차량이 지날 때마다 흔들리는 일이 부지기수라고도 했다.

지난 5월 시와 도시철도공사, 시공사가 현장을 찾아 진동을 측정한 결과 2~3분당 1회씩 확인됐다고도 했다.

거주민 A씨는 “2~3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진동은 하루 500번 수준이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인데 측정 이후 이렇다 할 해법이 없다. 최근 시공사측 손해배상 관련 직원들이 집을 찾았는데 ‘진동을 입증할 자료를 거주민이 직접 구해오라’고 했다”며 “시공사가 마감을 불량하게 해놓은 탓에 없던 진동이 생겨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대처가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보수공사라도 해야 하는데 언제 집이 무너질지 몰라 걱정되고 무섭다.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아야 이사를 가든 무얼 하든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도시철도공사도 일대 진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진동이 안전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장 피해 보상에 들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5월 진동을 측정



광주 도시철도 2호선 6공구 공사로 발생했다는 노후 주택 균열 현장

한 결과 해당 주택의 진동값은 0.3kine(가인)이 기록됐다. 주택 안전 기준치의 진동값(0.5kine) 아래로 계속되면서 당장 안전에는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현장과도 24m 떨어져 있어 최근접해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원인이 계속 불만을 호소하는 상황이다보니 시공사와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압해둔 공사 손해보험 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에이즈 숨기고 여중생 성착취 50대… “죄질불량” 징역7년 위치추적장치 부착·신상공개·취업제한명령도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현)는 25일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6년) 등을 명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 여학생들을 불러내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대가를 건네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청소년을 피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피입 없이 관계를 맺어 감염병을 전파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성병 감염 사실이 들롱났

다. 현재까지 A씨와 얽힌 피해 학생들은 성병 감염 검사에서 모두 음성인

나온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피해자의 성을 사거나 유인했고 피해자 대다수가 아동·청소년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예방 행위 없이 감염 전파·매개 행위를 했고 과거 4차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광주 여성 인권단체는 “A씨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강력 처벌을 받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송현근 기자

‘수익대’ 농협 공동방제 업체 선정 잡음… 투명성 강화 시급

사전 공모 의무화·사후평가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추진해야

농촌 현장에서 벼 병해충 예방을 위해 농협이 추진하는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한 공동방제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업체 밀실 선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역대가 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아 조합원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남지역 농업인 단체 등에 따르면 각 지역 농협은 매년 벼 출수기(벼가 꽃을 피우고 수정에 쌀알을 형성하는 시기)를 전후로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방제 비용은 대부분 전액 조합원인 농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며 규모가 큰 곳은 수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일부 농협에서는 공개모집이나 제안서 심사 없이 특정 업체에 개별적으로 견적을 요청해 계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선정 모집공고 부재’, ‘제안서 제출 누락’, ‘업체 선정 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일

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방제 전문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잡음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먼저 모든 농협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정·조건을 명확히 공개하고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사전 공모’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방제 성과와 민원 발생 여부, 안전관리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차기 선정에 반영하는 ‘사후평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전민규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22일 교육청 직원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공인이 날인된 위조 공문서 등을 제시하며, 민간 업체에 물품 제작 납품을 요구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공무원 사칭 사기는 7월 초부터 다수

“교육청 직원 사칭 주의하세요”… 현금 요구는 100% 사기

공문서 위조 사기사건 잇따라… “물품 납부·현금 요구하면 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업체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산하 모든 기관과 학교에 공무원 사칭 주의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조달청·건설협회·기계협회 등 유관 기관

에도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일반 시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누리집에는 팝업창을 띄워 안내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광주경찰청에 철저한 수사

가 이뤄지도록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이 개별 업체에 직접 연락해 계약이나 납품을 요구하는 일이 결코 없고, 특히 현금 요구는 100% 사기이므로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수상한 연락을 받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바다로 차량 몰아 처자식 살해한 가장, 검찰 무기징역 구형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가장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는 바닷속에서 홀로 빠져나왔으면서 자녀들을 살해해아겠다는 생각은 확고했다. 영문도 모른 채 찬 바다 속에 갇힌 자녀들을 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한 가장으로서 책임 의무를 포기한 채 가족을 사지로 이끌었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시12분께 전남 진도군의 한 항만 선착장에서 동남해기 아내와 두 아들(18·16)이 탄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건설현장 일용직인 A씨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빚을 져 채무로 시달렸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아내 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5월30일 오후 5시12분께 가족여행을 이유로 무안 모 숙박업소에 하룻밤 숙박, 다음 날인 31일 목포와 신안 등을 거쳐 진도로 이동했다.

이동 중 목포 평화광장 근처에서 차량 안에 있던 가족들에게 ‘영양제’라며 수면

제를 희석한 피로회복제 음료를 건네 복용하게 했다. 수면제는 아내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처방 받았다.

범행 후 홀로 차에서 빠져나와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A씨는 지난 2일 선착장에서 약 3km 떨어진 상점에서 전화를 빌려 형과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광주로 이동한 A씨는 범행 44시간 만에 광주 서구 양동길거리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늘어나는 채무와 노동청의 임금 체불 조사 등에 괴로워 했고 가족에 대한 왜곡된 책임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큰 일을 벌여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홀로 빠져나와 놓고 가족들은 죽으라고 놔둔 것”이나 “가장으로서 가족을 죽이고도 선처를 바라느냐”며 나무라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9월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승원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